

# 민주주의 역사의 굴곡진 주름을 펼쳐 보이다

김정인\*

[서평] 김민철(2023),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창비, 256쪽

## 1. 낯설게 보기

이 책의 제목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의문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머리말은 이에 대한 간명한 답으로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수천 년 동안 혐오, 경멸, 비난, 증오의 대상이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정부형태로 민주정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누가’는 서양 사상가들이고 그들이 두려워한 민주주의는 민주정이라는 정부형태였다. 이처럼 책머리에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명쾌하게 밝힌 이 책은 민주정에 대한 서양 사상가/혁명가들의 이해의 역사를 빼어난 글솜씨로 풀어 나간다. 왜 그들에게 민주정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민주정은 어떤 계기로 인정받기 시작했는가를 정교하게 논증한다.

한편 저자는 민주정의 역사를 펼치기에 앞서 머리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선포를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1919년 4월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에 주목하고 그것이 오늘날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점을 짚는다. 저자가 이와 함께 언급한 현행 헌법의 제1조 제

---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919년 9월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에 뿌리를 둔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선포는 “사실이 아니라” 이상이자 목표를 천명한 행위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했듯이 1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두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선포와 그 이후 그것이 100여 년 간 견재할 수 있었던 힘은 1919년 이전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마련된 것이었다. 1919년의 ‘사건’이 오로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선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 선포라는 사건을 언급한 후 저자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이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진부하고 흔한 이름이 되었고 투표, 입헌주의, 법치가 민주주의의 본질로 치부되고 있으며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체제, 또는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가 곧 민주주의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투표나 시험으로 대리인을 뽑아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곧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성사적 접근법으로 묻고 대답하며 민주주의의 이해의 잣대로 제시한 것은 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자가 제시한 서양 민주주의 역사, 즉 민주정에 대한 이해의 계보를 익히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이성을 떠올리게 된다. 식민지와 독재를 경험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저자가 강조하는 민주정보다는 저항성과 실천성을 함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지향으로서의 독립과 민주화가 중심적인 분석 개념이 된다. 이러한 차이의 발견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1896년에서 1899년 사이에 계몽의 주요 주제였던 ‘습속’에 대한 고민이 서양의 계몽과 혁명의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갖는 보편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보편사로서의 민주주의 역사의 공통점과 일국사로서의 민주주의 역사의 차이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서양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깊고 넓은 공부를 바탕으로 핵심적이면서 도발적인 문제의식하에 쓰였기에 가능한 경험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어원은 ‘인민이 통치하는 것’으로서 통상 민주정을 인민이 통치하는 정부형태로 해석해야 서양어의 뜻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규정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인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관리를 선출하는 민주정을 뛰어난 사람들을 투표로 선출해서 통치하게 하는 귀족정과 대비한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선거제도는 귀족정에 가깝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인민 주권론과 투표가 결합하는 대의민주주의로 변용된 것일까? 이것은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진 핵심 질문이기도 하다. 그 답은 두 개의 틀로 나뉘어 제시된다. 1부에서는 고대 이래 오래도록 민주정이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18세기 말 유럽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했는지를 살핀다. 시기적으로 보면 1부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민주정에 대한 인식을, 2부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비롯된 민주적 전환과 그 이후를 다룬다. 이 책은 많지 않은 분량에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에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깊고 굴곡진 주름처럼 응축되어 있어 제대로 살필 수 없었던 민주주의 역사의 쟁점들을 드넓게 펼쳐 보인다. 책장을 넘기며 도발적인 제목처럼 민주주의에 대해 낯설게 보기를 시도한 저자의 공력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 2. 민주정을 두려워하고 저주한 긴 세월

1부 「“민주정만 빼고”: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사상의 시대까지」에서는 민주정에 대한 고대, 중세, 근대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의 이해를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당시 존재했던 민주정에서는 인민의 정념과 변덕에 휩쓸리는 통치가 이뤄진다면 민주정은 민치가 아닌 법치의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역사순환론에 입각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고민하면서 여러 정부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혼합정체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리스 도시국가와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유럽 사상가들은 민주정에서는 법치도 불가능하고 국가도 존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주정은 물론 공화정도 거부하면서 군주정, 귀족정 혹은 둘의 합체만이 안정적 법치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근대 태동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철학자와 법률 체계를 양분으로 공화주의 패러다임과 자연법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공화주의자와 자연법학자 모두 민주정이 수립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정 반대의 이유로 민주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민들의 부족한 덕성을 들었다. 그 대신 그들은 덕성을 갖춘 소수의 통치를 지지했다. 옳은 삶을 목표로 삼았던 자연법학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지고 있으며 인민에게는 부족하다며 민주정에 반대했다. 그들은 민주정을 비현실적이며 올바르지도 않은 최악 체이자 최악의 정부형태로 규정하고 다수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18세기 절대군주제하에서 왕권신수설에 반대했던 개혁가들은 민주정을 절대왕정의 대안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계몽사상가 대부분도 민주정은 최악의 정부형태이고 비현실적인 망상이라며 배격했다. 루소는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받는 민주정은 자연적 질서에 반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정부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귀족정이나 군주정은 인민주권의 원칙

을 충실하게 보존하기 어렵다며 공화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둔 혼합정체를 지향했다. 하지만 주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대의제에는 반대했다.

계몽사상의 시대에 계몽사상가들은 민주정의 물질적 토대(‘무지한 인민’), 이론적 토대(‘인민의 권력’) 작동방식(‘인민의 직접 통치’)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거나 국가의 문화적·경제적 자산이 파괴될 것이라고 믿었다. 철학자들과 개혁가들도 민주정이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정으로의 변화는 곧 타락이라고 여겼다. 칸트는 대의정부만이 법치국가의 토대가 되며 모든 민주정은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라고 주장했다. 혁명가들은 프랑스에 민주정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지도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의 시대에도 인민이 직접 권력을 쥐는 것은 다수의 폭정 또는 군사정권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화파 혁명가들은 민주정을 거부하면서 인민주권론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써 대의정부에 주목했다. 그들은 파괴적인 정념에 지배당하는 인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저자는 1부에서 “루소를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보는 해석”이 시대착오와 오독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루소만이 아니라 대다수 계몽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했음에도 현대의 기준을 과거에 억지로 투사하는 것도 시대착오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루소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로부터 근대 민주주의의 원류를 찾아내려 하는가” 저자처럼 민주주의 기원으로서 계몽사상에 주목하는 것이 시대착오와 오독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오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시 지성사적 접근법으로 탐구해 볼 만한 주제다.

### 3. 민주정의 근대적 정립과 변용이 일어난다

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에서는 오래도록 경멸과 공포의 대상이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당성의 원천으로 변이되는지를 살핀다. 서양 근대 혁명기의 사상가들이 처음으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생산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부각된 쟁점들을 고찰한다.

프랑스혁명 이전 수백 년 동안 대부분 사상가들은 인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불안을 공유했다. 인민은 언제나 무지하고 정념에 휘둘리며,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고 재산권의 보호와 법치라는 원칙을 파괴하며 결국 명망 있는 장군들에게 국가권력을 넘겨주기 쉬우니 그들에게 권력이 쥐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의 시대와 함께 인민의 거리 정치가 도래했다. 또한 혁명의 순간이 오자 인민은 인민주권을 지식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고 행동했다. 이처럼 187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인민이 정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 대의제를 통해 민주정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서 민주정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주권의 조건 원리로서 수용되었다. 이제 인민은 정치 참여와 자유로운 언론 활동,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계몽된 주권자로서 자신의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1795년에 출범한 총재정부하에서 활약한 민주파는 인민과 가까웠고 인민을 신뢰하면서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민이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는 정부형태를 구상했다. 그들은 공화파의 엘리트주의에 저항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하나의 이론체계로 정립했다. 민주파는 인민은 암세포가 아니며 국가의 부강 안정과 인민의 권리 복리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대의제와 민주제를 계몽이라는 접착제로 결합하면 상업사회의 습속을 개선하고 인민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국가는 번영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민주정의 어리석음과 무질서만 생각하지 말고 민주정이 가져올 자유와 평등,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그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민주파의 대의민주주의 이론에서 투표는 적법하고 현명한 주권의 행사를 의미했다.

그런데 민주파 존재 이전에는 인민주권론이 군주정·귀족정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인민은 평상시 통치를 선출된 엘리트에게 맡기는 그저 ‘잠들어 있는 주권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파는 민주정을 “법률상으로는나 사실상으로는나” 인민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형태로 제시했다. 이처럼 인민주권이 민주정이라는 정부형태와 불가분으로 엮이면서 민주정은 언제나 ‘깨어 있는 주권자’인 인민이 자신이 손수 뽑은 대리인을 감시하고 그 직위와 행위를 통제하는 정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정이야말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것이 민주파의 주장이었다.

한편 민주파는 인민의 습속이 훌륭해야 민주적 정치체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정에서는 평등과 부국강병 사이에 선순환이 존재한다며 민주적 경제의 대원칙으로 중도적 평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 전체가 법률과 무력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적 소유권의 토대에는 인류 공동의 자연적 소유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했다. 이 논리에 기반해 민주파는 중도적 조세 정책으로 누진세 신설과 간접세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농과 노동자를 소유한 소규모 작업장과 가내수공업에 기반한 제조업이 민주정에 적합한 습속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상업에 있어서는 완전한 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파는 대의민주주의에 적합한 농업, 제조업, 상업을 위한 정치경제학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했다.

19세기에 들어와 많은 혁명가들은 여전히 유럽의 모든 민족은 아직 민주정에 걸맞은 덕성과 습속을 갖추지 못했고 민주주의는 시기상조이며 공화국 건설조차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수의 혁명가들은 민주정을 계승하려는 입장에서 민주적 습속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민주정을 수립하려고 했던 실책을 바로잡고 미래의 민주정

을 준비하고자 했다. 거기에는 점진적 개혁의 길과 즉각적인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혁명적이고 실험적인 길이 있었다. 한편 프랑스혁명의 경험으로 민주정에 대한 공포심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사상가들은 민주정을 막거나 교정에 나섰다. 전통적인 공화주의 사상과 산업주의와 실증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사상이 민주정을 막는 방과제 역할을 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정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인민 통치의 폐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민주정에 삽입하고자 했다.

2부를 읽으면서는 인민을 신뢰하며 민주정을 전유하려는 민주파가 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민주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 사상가와 지식인이 다수였고 그들도 나름의 길을 선택해 민주정에 대응하려 고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시사점을 얻는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라 당연시하는 권리들은 민주파가 인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글을 대표하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말을 대표하는 정치협회 결성과 토론의 자유, 그리고 공교육을 통한 인민 계몽 등과 같은 민주파의 주장은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 논설의 주요 논제들이었고 정치협회로서의 독립협회의 주된 토론 의제였다. 인민은 덕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 덕성을 키우고 유지하는 역할을 계몽이 맡아야 하며 이를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편교육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파의 정치사상 역시 『독립신문』 논설과 독립협회 토론회와 서울 시민의 자발적 집회인 만민공동회에 곧잘 등장했던 주장이었다. 입헌군주제가 “군주정 체제와 공화정 체제의 양쪽 국가 체제를 절충한 것으로서 오늘날 비교적 가장 완전한 정치체제”라는 공론이 형성되고 있을 그 무렵 전제군주 고종이 독립협회가 왕이 없는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결국 그것을 빌미로 해산시킨 연유를 이 책 2부를 읽으면 더욱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서양에서 민주정의 계승과 방어, 그리고 교정의 대응을 통해 각각 개량적 길과 사회주



의의 길, 산업주의와 실증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대의제 전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이제껏 한국 근대에 등장한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도 좌우파의 이념이라는 해석을 넘어 민주주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재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적 잣대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경계는 한국 근대사상사 연구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의 지식인들의 인민에 대한 무시와 공포를 당대의 맥락에서 살피지 않고 그저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성찰로 과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면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된 서양의 정치체제와 인민주권론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해가 민본(民本)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인민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 4. 지금 여기, 현실을 베풀는 역사 연구

이 책에는 결론이 없다. 하지만 2부의 마지막 절인 「현대정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성」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발전서사와 승리서사는 틀렸다. 오래도록 민주정으로 표상화된 민주주의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국가와 문명을 멸망으로 이끌 민주정의 도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이론적 방파제가 세워졌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고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주권 이론과 투표를 떼어 놓는 이론을 만들고 기존의 민주적 개념에 새겨진 급진적 전망을 모두 씻어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전통적인 대의정부를 다소간 개량하고 새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의미가 민치정 혹은 민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간접적인 민주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이후에는 민주주의=선이라는 전제

가 통용되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대목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유 투표가 곧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고 선전한 것에 대해 ‘소련을 의식한 반공적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인에게 철차적 민주주의에 국한된 민주주의를 이식하고자 했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국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빚어진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해 저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오늘날 동서양을 통틀어 민주국가라고 불리는 나라 대다수는 선출되지 않은 법관과 관료가 인민의 선택과 지배권을 극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의 앞머리에서도 이러한 대의제는 서양에서 혁명의 시대에 민주정을 주장한 소수 민주파 개혁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공포를 다스리고자, 즉 민주주의를 순화하기 위해 민주정과 결합한 것임을 지적한다. 저자가 볼 때 오늘날 국가는 지배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통치가 투표와 대의제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정이 아니라 대의제를 활용한 투표 귀족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시대불변의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단순한 원칙에 기반해 민주정을 정의한다면? 저자에 따르면 “보통사람의 목소리가 통치를 좌우하는 정부형태”다. 그는 자유주의적 전통에서조차 “꽤지 같은 대중”으로 치부된 바로 그 인민의 지성으로부터 민주정의 힘이 나온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개인이 아닌 집합적 주체로서 인민은 큰 그림을 보는 미덕을 갖추고 있고 인민의 판단은 대승적이며 엘리트의 전문적 판단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기에 로베스피에르의 말처럼 “인민의 명령은 벼락과도 같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문단에서 인민의 통치만큼 엘리트의 통치도 불완전했고 인민의 무지만큼 엘리트의 무지도 역사 속에서 선명히 드러난다고 일갈한다.

책을 덮으며 이 책의 마지막 두 문단에서 오늘의 현실을 단단히 버리는 역사 연구의 치열함에 전율을 느낀다. 그리고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시위를 각각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두 지식인을 떠올려 본다. 『녹색평론』 주간 김종철은 공동체의 미덕에 주목하며 귀족정의 요소가 강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다. 선거에서는 거의 언제나 명망가나 재산가 혹은 그들의 비호와 지원을 받는 특권적인 엘리트가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대 아테네 민주정에서 시행한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촛불을 승화시켜 민주주의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어 국가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기존의 국회와 정부의 일을 감시·평가·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적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정치학자 최장집은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진사퇴할 일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다.”라고 주장하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인 것과 귀족주의적인 것을 결합하는 하나의 실험이자 과도한 민중적 열정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부연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실현했던 제비뽑기를 통한 민주적 선출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의 폭도 넓었고 잘못된 통치자를 폭력 없이 퇴출시키는 데 있어서도 더 우월한 효과를 가졌다고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가 더 우월한 체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2016년과 2017년의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민주주의적 대안에서 드러나듯이 저자가 책 제목을 통해 제기한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와 책의 말미에서 되물은 오늘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여기’, 현재의 시공간에서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다. 이것이 바로 현재성을 품은 역사 연구, 현실을 버리는 역사 연구다.

